

‘위기’와 ‘기회’의 두 얼굴 지녀

1997년 채택, 기후변화협약 내용 보완·구체 감축의무 및 일정 포함
경제논리 맞물려 양상 복잡, 농업분야도 여러 가지 해결과제 많아

■ 홍 보 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지난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협약을 주도해온 유럽에선 “인류가 비로소 깨어났다”는 말이 나온다. 처음으로 녹색 지구를 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의정서 채택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실효성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절름발이 출발을 했다는 지적도 따라다니고 있다.

기후협약 5년 후, 97년 교토의정서 채택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 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데 반대하였으며, 탄소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 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미국 이탈, 유럽연합(EU)과 통상문제 가능성 커

이산화탄소 등 6종류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에는 141개국이 비준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비준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이란

발효조건이 충족됐다. 의정서 발효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990~2010년 세계 온실가스 증가분의 10%로 분석된다. 1차 의무감축 대상국인 36개 선진국은 2008~2012년 전체 배출량을 90년 대비 5.2%까지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EU) 8%, 일본은 6%, 캐나다는 6%를 감축해야 한다. 개도국이 대상인 2차 의무감축은 2013~2017년에 이뤄진다. 2002년 11월 의정서에 비준한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개도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가스배출 규제가 경제논리와 맞물리면서 양상은 복잡해져 있다.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면서 전체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는 미국은 이탈했다. 이 문제는 향후 의정서 발효를 주도한 유럽연합(EU)과 미국간 통상문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선·후진국간 이해충돌도 풀어야 할 과제다. 향후 8년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개도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97년 기준으로 38%, 2020년에는 50%를 차지한다. 미국은 중국, 인도 등을 규제하지 않는 조치는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의정서 이행으로 2100년까지 기온상승을 0.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예상 역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기온이 20세기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는 환경론자들의 '하키 스틱' 이론도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세계 11위의 경제규모 및 OECD 가입국임을 고려할 때 2차 대상국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교토의정서란?

The Kyoto Protocol = 교토기후협약(京都議定書) 1992년 6월 리우 유엔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



■ 협약내용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12년까지 90년 수준의 평균 5.2% 이상을 줄여야 함. 2001년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5.2%에서 1.8% 감축으로 축소됨.

■ 대상국가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함. 미국은 거부한 상태. 한국과 멕시코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 면제.

한편 기후변화는 농업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경작 가능 지역의 지리적 변동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및 토지이용도의 변화 예측, 적응품종과 수확량의 변화 예측 및 적응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 발생유형 예측과 대응기술 개발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업부문의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Y